

승복과 불복, 갈림길에 선 美민주주의



경찰·시위대 벌써 충돌... 약탈 방어막 두른 뉴욕 명품거리 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경찰들이 반(反)트럼프 시위를 벌이는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 (왼쪽 사진) 시위대는 이날 트럼프 지지자들의 자동차 페어리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른쪽 사진은 대선을 둘러싼 혼란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날 뉴욕 5번가 백화점 '식스 피프스 에비뉴'의 쇼윈도가 합판으로 가려진 모습. 미국에선 대선일(3일) 전후 트럼프·바이든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美 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 집계 끝까지 않은 대선 당일(3일) 밤에 '조기 승리'를 선언할 계획을 세웠다고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또 트럼프는 이날 "선거가 끝나자마자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사실상 선거 불복 가능성이 시사한 것이다. 미 역사상 한 번도

트럼프, 개표 초반 앞서면 조기 승리 선언... 우편투표 소송도 언급
바이든 지지자도 불복 움직임... 대선 이후 폭력시위 등 혼란 우려
없었던 선거 불복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약시오스는 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선거 당일 개표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을 경우 그날 밤 단상에 올라가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완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

나오고 있다. 대선 당일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되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우편투표 개표 속도가 불르면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미국 50주(州) 가운데 22주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투표용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조기 승리를 선언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이날 '조기 승리' 선언 가능

공시가 6억 이하만 재산세 감면 가닥

당정, 이르면 오늘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시 가격 상한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 등이 강하게 요구해온 '6억~9억원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黨政)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이르면 3일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도 낮추자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비(非)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최연진·주희연 기자 A5면에 계속

文의 침묵

與, 당원투표로 '문재인당헌' 깨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결정
文대통령·靑, 입장 표명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2일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黨憲)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이 당헌 조항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

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천은 당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서 86.64%가 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후보 공천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주신 당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일 당 중앙위원



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민주당이 공천을 강행하니 가가 찰 노릇"이라며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의도된 침묵이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번 전 당원 투표율이 26.35%에 머물러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전 당원 투표의 효력을 '3분의 1(33.3%) 이상 투표 때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은 것일 뿐이어서 '3분의 1 투표율'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기사 A5면

文이 내세운 노동개혁 공약 직무급제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5곳만 시행

노동개혁 제로 文 정부
직무급제
코트라(KOTRA)의 노사는 지난 1일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했고, 올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이 깎이게 된 일부 노조원이 반발하는 등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직원 1000명이 넘는 대형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공언한 곳이 아직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 분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직무급제 도입이 집권 3년 차를 한참 지난 지금까지 지지 부진하다. 직무급제는 능력을 집중 평가
: 직무급제
근속연수나 직급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따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할 수 있어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호봉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직무급제 도입은 대부분이 친(親)노조 성향인 현 정부의 노동정책 중 거의 유일하게 경영계도 동의하는 노동 시장 개혁 정책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대상 공공기관 340곳 중 도입이 완료된 곳은 한국재정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5곳에 그쳤다.
곽래건 기자 기사 A4면



이희성 의장·물가에서 노는 모임
韓·日 국제환경상 수상 A14

八面鋒
대통령 스스로 만든 黨憲 뒤집는데 먼산 바라보듯. 불리한 일엔 침묵하고 유리하면 자랑하는 게 親文 스타일.
○
秋 범무 '검찰 농단'에 반발한 "나도 커밍아웃" 300건 댓글, 조회 수는 5만 2000여회. 一波가 萬波니 海濤될 수도.
○
美 트럼프, 대선 임박한 가운데 또 선거 불복 가능성 시사. 이라다 설마 內戰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요?

대한한방병원(서울) 200929-45059-45050호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이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 ☑ 잘 체한다
- ☑ 속이 더부룩하다
- ☑ 배에 가스가 잘 찬다
- ☑ 음식을 잘 못 먹는다
- ☑ 트림을 자주 한다
- ☑ 식욕이 없다
- ☑ 속이 항상 불편하다
- ☑ 명치가 막힌 듯 하다

여러분의 고민, 장덕한방병원(서초/부산)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한방병원(서울) 200929-45059-45050호

저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위장소화내과 교수로 35년 동안 위장병을 연구했으며, 퇴직 후에도 다중류안의원을 개원해 위장병 연구 등 임상을 15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장덕한방병원에서 의학·한의 학 협진 위장병 센터에 그동안 쌓아온 저의 연구와 임상경험이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기원 한의학박사
前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장
前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위장소화내과 교수(35년)

장덕한방병원 위장병센터

장덕한방병원(서초) 한의사전문 10명
한방내과전문의 류기원
한방내과전문의 김태경
한방내과전문의 김태연
한방내과전문의 이세연

한방내과전문의 승현석
한방내과전문의 황우석
한방내과전문의 조영
한방내과전문의 김지혜

의사전문 2명
내과전문의 이창홍
내과전문의 임종석
한방내과전문의 박송원
한방내과전문의 유종민

서초 (본진·부지부 지점 수련한방병원)
예약 문의: 02-523-3743
010-7387-3743

장덕한방병원 부산
예약 문의: 051) 312-8875
010-5944-8905

JDOH 장덕한방병원(서초) 위장병센터